

인권하루소식

2004년 11월 02일 (화)
제 268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사회보호법, 역사 속 퇴장 멀지않아
2. '야만'의 태국 정부
3. 가난 구제와 '나라님'
4. 표현의 자유 원천봉쇄?

사회보호법, 역사 속 퇴장 멀지않아

보호감호제 폐지 후 삼진아웃, 경과규정 도입 논란

24년간 반인권악법으로 맹위를 떨쳐오던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30일 당정회의를 개최해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행 사회보호법을 폐지, 보호감호제도는 완전히 없애기로 합의하고 심신상실 및 미약, 약물중독상태 등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치료감호규정은 '치료보호법'으로 별도 제정안을 발의,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삼청교육대 내의 인권침해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제정해 20년 넘게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사회보호법은 역사적 종말을 고하게 됐다.

하지만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경우 천여 명이 넘는 보호감호 대상자가 일시에 석방되면서 사회 치안 등에 위험성이 예상된다.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 당·정부는 보호감호 대상자를 죄질에 따라 순차적으로 풀어주는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한 보호감호제도의 폐지 보완책으로 미국의 '삼진아웃제'처럼 특정 범죄를 3회에 걸쳐 위반하면 엄중하게 가중 처벌하는 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 협의의 결정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사회보호법 폐지'에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경과규정"조치와 '삼진아웃제'의 도입은 또 다른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상희 변호사는 "사회보호법 폐지 결정은 '인권'과 '정의'의 승리"라고 반겼다. 하지만 "삼진아웃제도는 국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고 미국에서도 반인권적 측면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지금은 또 다른 '처벌규정'을 찾기보단 범죄자들의 사회정착 및 자활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와 지원이 더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청송보호감호소 가출소자 모임 대표인 조석영 씨 역시 "국회의 파행이 사회보호법 폐지의 발목을 잡지나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히는 한편 "보호감호제도를 이중처벌이라고 폐지하는 마당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형기를 다 복역한 사람들을 보호감호소에 서 더 살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대체입법으로 추진될 '치료보호법'에 대해서는 현재 원칙에 대한 합의만 존재할 뿐 그 세부내용은 이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야만'의 태국 정부

과잉 시위진압으로 최소 84명 사망

태국 정부가 시위 군중들을 향해 실탄을 발포해 6명이 숨지고 연행자들을 이송하던 중 최소한 78명이 질식사하고 2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10월 25일 태국 남부 나라티왓 주에서는 무기를 가졌다고 의심받아 갇힌 지역 주민 6명에 대해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3천여 명의 이슬람 신도들이 시위를 벌였다. 태국 정

부가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에 발포를 감행했고 최루탄과 물대포까지 동원했다. 또 시위대들의 옷을 벗게 하고 길바닥에 엎드린 채 손을 뒤로 묶는 등 끔찍한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더욱이 1,300여 명의 연행자들이 트럭으로 이송되던 중 78명이 질식사로 숨졌다.

그런데도 현재 태국 정부는 심문을 하기 위해 체포한 시위대의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방문 및 접촉 또한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제엠네스티 나탈리 힐 아시아담당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모든 죽음은 즉시 독립적으로 조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 바질 페르난도 이사도 "어떻게 78명이나 군용 트럭에서 질식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냐"며 "정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폭력적인 대응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큰 폭력과 긴장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비난했다.

국내 인권단체들도 1일 주한 태국대사관 앞에서 태국 정부의 '야만적인 시위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태국 정부는 이번 일에 대해 공개 해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다함께 김광일 운영위원은 "태국 탁신 총리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며 태국 내에서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무력을 행사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왔다"고 주장했다.

약 95%에 달하는 대부분의 태국 국민들은 불교도들이다. 반면 4% 정도가 이슬람교도들인데 이들은 태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리독립을 주장하며 중앙정부에 대항해왔다. 이에 태국 정부는 이슬람 세력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무기를 동원해 학살을 서슴지 않았다.

국제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1월 4일부터 지금까지 이미 4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고, 지난 4월 28일에는 무장단체와 정부군과의 충돌 이후 정부군의 보복으로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 방화나 폭발과 같은 소요 사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태국 남부 지방에서는 거의 매일 시민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살해를 당한다.

현재 나라티왓 주의 12개 구역 중 8개 구역에서는 통행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다. 태국 정부의 '야만적인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에는 태국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2003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 달 동안 2,245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한편, 주한 태국대사관 바위완 노라판놈 일등서기관은 "연행자 중 일부는 풀려났고 나머지는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상황을 알리며 "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태국 정부는 조사를 실시하지도, 자세한 상황을 발표하지도 않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가난 구제와 '나라님'

● 범용의 인권이야기 ●

지친 하루를 잊고 세근세근 잠자는 아이를 등뒤로 나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다. 오늘 하루 우리 세 식구가 얼마를 지출했는지 가계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다. 알뜰살뜰 살아서 1만 원도 안 쓴 날엔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흘러나오지만, '아끼고 아끼다가 한번 지출하면 왜 꼭 목돈으로 나가는지' 멍멍 멍멍 줄어드는 잔액을 보면 나오는 한숨을 들이키기 바쁘다.

아내의 출산을 계기로 내가 가계부를 작성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내 기억으로 혹자를 기록한 달은 한두 번 뿐이다. 알뜰살뜰 산다고 살았는데, 지내다 보면 항상 예상치를 초과하고 만다. 이 달은 의료비가 많이 들었고, 저 달은 경조사비가 많이 들었고, 이유는 다양하지만 하나같이 필요한 지출임엔 틀림없다. 비록 우리 집 가계부는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난 이것만큼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나의 인간다운 삶을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그나마 나처럼 '적자 가계부'를 기록할 수조차 없는 140여만 명의 최저생계비 수급권자들은 차라리 '인간다운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다.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250여만 명의 빈곤층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1급 장애인인 이승연 씨는 2002년 최저생계비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녀는 노령의 아버지와 역시 1급 장애인인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최저생계비, 장애수당 등을 포함해 국가로부터 70만 원정도 받고 있다. 내가 살아가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비용 70만 원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데다가 장애인으로서 한달 평균 15만 8천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늘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28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자구 노력이 극도로 힘든 이들에게 국가가 한 달에 70만원 정도만 지급해도 상관없다는 뜻이다. 빛이 3천만 원이나 되고 집세도 18개월이나 밀린 이들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야말로 '목숨이라도 유지하려거든 죽을 때까지 빚을 지면서라도 살아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옛말이 있다. 하지만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훌쩍 넘어 2만 달러를 바라보는 오늘날,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옛말'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가 나서서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7배가 넘는 소득불평등 구조를 개선해 3인 장애인 가구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다.

컴퓨터를 끄고 아이와 함께 잠을 청한다. 그리고 지친 하루를 잊으며 나는 되된다. "가난 구제, 나라님이 아니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지!"

© 범용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표현의 자유 원천봉쇄?

경찰, "1인 시위도 처벌하겠다"

경찰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1인 시위마저 원천 봉쇄하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경찰청은 1인 시위의 형태를 떠나도 유형에 따라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자들을 처벌하도록 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경찰청 정보과 한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파월 미 국무장관 방한 때 1인 시위자가 계란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예방차원에서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열 지어 시위하는 '인간띠 잇기' 시위의 경우 집회단체와 목적이 동일하고 의사 연락이 용이한 경우 △각기 다른 단체의 회원이 1인 시위를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유사한 목적으로 시위할 경우 △여러 사람이 똑같은 내용으로 1명씩 교대로 시위를 할 경우 등을 집시법으로 처벌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경찰은 계기만 생기면 억압적 기능을 강화하려고 시도해 왔다"며 "이제는 명확한 범규정도 없이 1인 시위마저 통제하려고 있다"고 성토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상 대사관이나 청와대, 국회 그리고 법원 등 인근 1백미터 이내 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택된 방법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발상에만 몰두하고 있는 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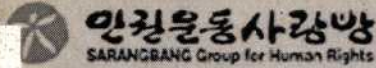
이어 박 상임활동가는 "집시법은 사실상 규제가 많아 '집회금지법'으로 비난받아 왔다"며 "1인 시위를 문제삼기보다 집시법을 제대로 고쳐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질서 준수'나 '불법 행위 엄단'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이번에는 그동안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1인 시위에 화살을 겨누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1월 03일 (수)

제 268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국보법 역사에 마침표 찍겠다"
2. "저기요, 저 아세요?"
3.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국보법 역사에 마침표 찍겠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국회 거리 농성 돌입

1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국회 앞에서 무기한 거리 농성을 시작했다. 차가운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2일 오전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겠다는 결의를 공표했다.

국민연대는 현재 공전 중인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오욕으로 점철된 국가보안법 56년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국회 앞 거리 농성을 거점으로 "전국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의 파고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총리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 의사일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또한 국민연대는 "한나라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개혁 법안을 좌절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경고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따지는 정치공방을 중단하고 민주노동당 등과 협력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충련 백종호 의장은 이날 단식을 선언하고 함께 농성에 들어갔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통일을 해치고 수많은 수배자를 양산한 악법"이라며 "민족의 화합을 막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데 앞장서서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한충련은 모두 8명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친한 친구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수배생활을 하고 있다"며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 빨리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민주노동당의 김창현 사무총장은 "김용갑 의원이 의원직을 내걸고 국가보안법 사수를 주장하는 등 수구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어 향후 의회 전략에 대해 "상임위에서 토론을 통해 보수양당을 압박하며 완전폐지의 목표를 달성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상근 농성자 20명, 일일 농성자 60여명으로 구성된 농성단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국민 선전전을 벌이고, 저녁에는 촛불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또한 개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폐지를 설득하는 한편 '반인권, 반민주 의원 명단 발표'도 2회 계획하고 있다.

한편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균의문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과거청산법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 농성에 들어갔다.

<기사 처음으로>

"저기요, 저 아세요?"

▷ 즐거운 물구나무 ◀

#1. "학생, 내 얘기 좀 들어봐"

'어디까지 가십니까'로 시작된 택시기사의 말은 '학생'이라는 호칭과 함께 어느새 '반말'로 바뀌어 있다. 가끔씩은 "왜 말을 놓고 그러십니까"라고 항의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 나 학생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 택시기사의 말은 이미 저만큼 달려가고 있다. 대개 그때부터는 '혼계'에 들어간다. 이때 반론이라도 펼칠라치면 그건 이미 '반론'이 아니라 '말대꾸'가 되고 택시기사는 '버르장머리'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부터 '안봐도 비디오'다. 조희시간 교장선생님 훈시같은 지루한 일장 연설이 이어진다.

#2. "어머니, 아니...손님"

삼점 점원의 '어머니'라는 호칭에 잔뜩 눈살을 찌푸리자 그 점원은 금세 당황하며 '손님'이라는 호칭으로 '잘못'을 만회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미 얼얼해진 물. 선배는 자기는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어머니'라고 부른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당황하며 "저 애기엄마 아니예요"라고 말하기라도 하면 그 때부터 그녀는 수많은 질문공세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그럴 때면 왜 애기엄마가 아니라고 '커밍아웃'을 했는지 차라리 후회가 될 지경이다.

#3.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아버지는 당신에게 하는 말인줄 알면서도 굳이 못들은 척 하신다. 당신이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완강한 저항의 표현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하철 타는 걸 싫어 하신다. '젊은이'들이 자리를 양보하는 게 영 마뜩지 않은 모양이다. 가끔은 "내가 왜 할아버지냐"며 직접적으로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하신다.

호칭은 관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관계 맺는 방식을 결정하고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학생'이라는 호칭은 '어른과 학생'이라는 수직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고, '어머니'는 결혼과 출산을 암묵적으로 강요한다. '할아버지'는 '당신은 늙었습니다'라는 의미를 듣는 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달한다. 과연 우리 모두가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호칭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일까?

<기사 처음으로>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1. 국보법 체제를 벗어 던져라

예술가들은 'A4(art for) 자유-국가보안법과 창작의 자유전'을 통해 창작의 원동력인 '상상력'을 위협해 온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을 고발했다.(10.4) 기독교 원로인사 30여 명은 "안보불안 증폭등에서 깨어나자"며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독교 원로 선언'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토론회를 열고,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10.6)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4개의 보완입법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4개의 대안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여전히 침해한다"며 국보법의 형식적 폐지일 뿐이라며 비난했다.(10.12) 여성단체들은 '국보법폐지여성실천단'을 발족했으며, 국제 엠네스티는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각 당 대표에게 전달했다(10.13).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와 함께 '내란목적단체조직' 조항 등을 포함한 형법보완안을 확정했다. 인권·사회단체는 "열린우리당의 최종안은 국보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형법으로 옮긴 반인권적인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고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10.17)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행사들도 줄을 이었다. 광화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문화제'가 열렸으며, 다음날 한성대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골든벨 퀴즈대회'가 청소년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10.23~24) 민변과 민주법연은 열린우리당의 최종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해 구대적인 국보법 체제에서 벗어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10.28)

2. 한국, 노동자 탄압 초일류

60여 개에 이르는 민주노총 소속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정부에 부당노동행위와 악성노동탄압 근절 등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2박 3일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삼성SDI는 노조설립에 따른 탄압과 관련해 언론 취재에 응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회사 정문 밖으로 내쫓았다.(10.4) 여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들을 모두 사법처리하겠다"며 업포를 놓았다.(10.8) 부당노동행위를 진정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을 근로감독관이 그 자리에서 신고, 연행되기도 했다.(10.12) '엘지정유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가 발표돼 '반성 서약서'와 '경위서' 작성 강요 등 일명 '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들을 탄압해온 엘지정유의 행태가 폭로됐다.(10.13). 안양시 청소대행업체의 임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환경미화원들이 한 끼번에 해고돼 복직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안양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10.14). 국제공공노련은 한국 정부에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1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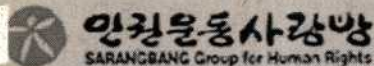
3. 이제는 풀어야 할 숙제, '과거청산'

군의문사 관련 단체들은 포천시 보병제6군단 앞에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입법안'에 군의문사 관련 법안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10.14)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는 한나라당사 앞에서 전국유족대회를 개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한 강력한 기구 설립"을 주장했다.(10.15) 대법원이 조작간첩 사건에 대해 재항고 기각결정을 내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10.21)

<기사 처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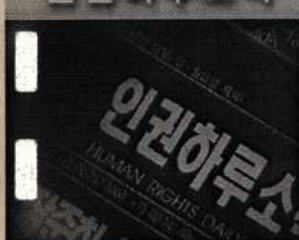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1월 04일 (목)
제 268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보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농성장을 가다> ① 국가보안법 폐지
 2. 학생 권리 회복의 물꼬 트자
 3. 그들은 '하이에나'였다

<농성장을 가다> ①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편집자주] 지금 여의도는 4대 개혁법안 등의 연대조직들이 천막 농성을 시작해 휴업 상태에 있는 '불거진 국회'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오늘부터 5번에 걸쳐 각 사안의 농성 책임 활동가들을 만나 투쟁의 쟁점과 전망을 들어본다. 국가보안법 폐지 농성단 책임운영위원장인 박래군 활동가를 제일 처음 만났다.

래군 활동가는 80년대 학생운동 출신인 이른바 '386세대'. 99년 12월 28일부터 13일 간 명동성당에서 계속된 '후한기 노상 단식 농성'을 가장 지독스러운 국보법 투쟁으로 기억하는 그는 반독재·민주화 투쟁으로 시작해 인권운동에서 간뼈 굵은 활동가가 되기까지 국보법 폐지 운동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다.

호랑이를 종이 호랑이로

87년 6월 항쟁 이후 운동 사회에서는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반독재·민주화 투쟁에 있어 국보법은 '눈에 보이는 억압의 실체'였다고 말하는 래군 활동가는 "운동사회에 직접적인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이 법의 폐지는 양심수 석방운동 등 진보진영의 폭넓은 중심 이슈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노태우 정권은 91년 국보법 날치기 개악으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배신한다.

99년 김대중 정부 말, 국보법 폐지 운동은 다시 불붙기 시작한다. 현재 국보법 폐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전신인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와 '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가 이 때 결성된 것이다. "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는 당시 전술적으로 완전 폐지보다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7조 삭제'를 주장했는데 이는 폐지 투쟁이 인권적 관점을 획득하는 성과였다"고 그는 분석한다. 국보법 폐지 운동을 보다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제기한 인권운동의 노력인 것이다.

국보법, 극우의 바이블

현재 국보법으로 인한 시국사범이 현저히 줄었고, 한총련 대의원이 되면 자동으로 수배되는 상황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국보법 피해는 더 이상 없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 그는 단호했다.

국보법의 정체는 극우에서 오히려 더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보는 그는 "진보진영에선 국보법을 단순히 '하나의 법'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극우에게는 이들이 유지하려고 하는 체제의 신념을 형성하는 바이블 같은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들에겐 '믿고 의지하는 경건'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국보법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결사항전을 다짐하며 현정부를 향해 '색깔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의도대로 아직은 '색깔론'이 우리 사회의 안보불안을 자극하는 것이 사실이다. '국보법'이라는 가장 무서운 흉기부터 제거한 후 과거청산 등을 통해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국보법 폐지는 시작일 뿐

아직 촉매를 들기엔 이르지만 국보법 폐지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먼저 형법의 '안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문제인데, 한나라당을 달래기 위해 내놓은 열우당의 형법 개정안은 국보법의 독소조항을 이어받을 수 있어 더욱 문제라고 한다. 폐지 이후 형법에 존재하는 국보법의 강제도 손봐야 하며 파생 법률인 '보안관찰법'과 함께 '공안문제연구소'도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우려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신자유주의가 강화되면서 기득권층은 새로운 안보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테러방지법"이라고 한다. 유사한 악법의 제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그는 기득권과 싸우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저항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런 농성장을 '불법설치물'이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본권'을 말하는 '표현의 열린 공간'이며 이후 광범위하게 전개될 생존권 투쟁에서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6년의 쇠사슬을 끊는 '국보법 폐지 운동'은 보다 진전된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학생 권리 회복의 물꼬 트자

'학생의 날' 토론회 "학생회 법제화 필요"

"회의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해진 안건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안건을 낼 수는 있지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결정은 오로지 지도위원회만 할 수 있을 뿐 학생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총학생회 회장인 이은성(고 2) 씨가 설명한 학생회의 모습은 어느 특정 학교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치' 기구이지만 권한이 없어 이름뿐인 학생회, 학생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학교 행사에 '잡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것이 현재 학생회가 처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학생들과 교사들은 3일 '75돌 학생의 날'을 맞아 '학생회 법제화와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학생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학생회의 법적 근거는 초·중·고·고교법 제17조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는 규정뿐이다. 전교조 이을재 참실위원장은 "학생들을 보호와 감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학교에서 이러한 애매한 규정으로는 학생회 활동이 보장받지 못한다"며 "법제화를 통해 학생회의 권한과 책임, 활동 등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회 예·결산권이나 학생회 행사 전반에 대한 의결권 등 학생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학생회 임원자격에 대해서도 성적이나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보다 상세하게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회 법제화를 위한 운동본부(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누리(고 2) 씨는 "물론 학생회 법제화만으로 학생자치가 완전하게 실현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억눌려 왔던 학생들이 스스로 나서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회를 함께 준비한 김수경(고 1) 씨는 "학생회 법제화는 현재의 허울뿐인 학생회가 진정한 의미의 학생 자치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다산인권센터 등이 주최한 '2004 청소년 모의법정 대본 공모전' 시상식에 이어 모의법정이 진행됐다. 대상을 받은 <인형공장>은 보충과 야간자율학습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빼앗긴 학생이 학교의 '인형'이 되기를 거부하며, 청소년기에도 자기 삶을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기사 처음으로>

그들은 '하이에나'였다

경찰, 국회 천막농성 폭력 철거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천막은 부서져 농성장은 금새 이수라장이 됐다. 항상 민중의 요구를 짓밟아왔던 군홧발로 전경들은 천막을 농멸했고, 인권활동가들을 모독했으며, 장애인들을 절망케 했다. 3일 여의도 농성장은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 천막의 잔해들만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여당도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는 주장과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의 진상을 낱알이 밝혀 다시는 끔찍한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도 이동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뭐 그리 불순한 것이었기에 그들은 방패를 휘두르고 폭력을 앞세웠을까.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 전경들 앞에서 '비폭력'을 외치며 온몸으로 저항했던 농성단들은 천막을 지켜내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었다. 천막 안에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경들은 '피맛을 본 하이어나'처럼 사정없이 천막을 부수고 찢어놓았다.

'폐허' 위에서 농성단들은 전경들의 차를 맨몸으로 막아서고는 "경찰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결국 차는 움직이지 못했다. 농성단 책임운영위원장 박래균 활동가는 "평화로운 농성장에 경찰의 폭력 집탈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폭력적인 천막 철거를 규탄하며 "천막이 원상복귀될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전했다. 전경들은 한 두 차례 진압을 시도했지만 농성단은 밀리지 않았다. 해가 기울어 어두워졌을 때 사람들은 촛불을 들었고 '남겨졌던' 전경차는 황급히 꼬리를 감췄다. 국회 앞에는 다시 천막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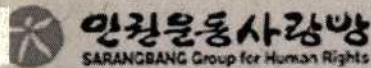
앞서 이날 낮에는 올바른 과거청산과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인권활동가 340명의 선언이 발표됐다. 이들은 "식민지 시대를 제대로 평가하고 역사에 올바르게 기록하는 것, 의혹을 규명하고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것, 피해자에게는 명예회복을 가해자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 이 모든 과거청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의 숙제"라고 주장했다. 또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자유를 목줄랐던 자들이 반성은커녕 비이성적인 선동을 일삼고 안보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모독하지 말고 국보법을 완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청산, 언론개혁,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등 4대 개혁입법을 촉구하는 단체들과 함께 장애인이동권연대·교육권연대가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장애인 교육예산 6% 확보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김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1월 05일 (금)
제 269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부시, 전범민중재판으로 심판
2. <전쟁범죄 연재> ① 무차별 공격
3. <농성장을 가다> ②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보장
4.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을 위해 - 「비폭력 대화」

부시, 전범민중재판으로 심판

12월 7일 준비하는 1만 명 기소인 운동 전개

현지 시각 3일 부시가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승리에 도취해 득의양양한 부시의 모습을 언론으로 접한 많은 사람들은 걱정과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했을 것이다. 이라크 전쟁, 추가 파병, 한반도 전쟁 위험 등 부시의 당선은 전 세계 민중의 생명에 그 자체로 위협이다. 부시의 재선이라는 '비보'를 접한 지금,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기소운동'에 더욱 관심을 모으게 된다.

현재 3,600명의 군인을 이라크에 보낸 한국은 세계 3위의 파병국이다. 전쟁을 주도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수인 것. 지난 9월 20일 발족한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준비위원회(아래 준비위원회)'가 최근 발행한 신문은 "매일 20명의 이라크 아이들이 폭격, 영상질조, 병원부족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10월 현재,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은 1만5천3백97명이라고 공식 집계되고 있고, 이라크 인구 절반 이상이 15세 미만이며 어린이 사망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전쟁에 파병한 한국 정부는 '반인도적 전쟁 범죄'에 동참한 것이라고 준비위원회는 말한다. 준비위원회는 한국의 파병이 어떠한 전쟁범죄에 동참하고 있는지 밝히는 작업을 재판이 시작되는 12월 7일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상자 기사 참조>

광범위한 민중들의 참여를 위해 준비위원회는 현재 1만인 기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소장'을 쓰는 행위로 동참할 수 있는 기소운동에 4일 현재 1,101명이 동참했다. 인터넷에서도 기소장을 쓸 수 있으며, 지금까지 모아진 기소장은 '전범민중재판운동 홈페이지(gopeace.or.kr)'로 가면 볼 수 있다.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시와 블레어, 노무현'을 기소하는 다양한색의 이유를 만나볼 수 있다.

전범민중재판은 재판관과 배심원이 있는 등 재판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법률가들의 독무대가 결코 아니라고 준비위원회는 강조한다. 한 톨의 쌀알이 모여 장독 하나를 가득 채우듯이, 매일 차곡차곡 늘어가는 이 '민중 기소인들'의 기소 이유 발표와 증언이 4일의 재판 일정 중 3일을 채운다. 최종 판결 또한 민중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맡게 된다고 한다.

준비위원회는 이 재판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 위해 재판 이후의 운동도 구상 중이다. 1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노무현 대통령을 전범으로 판결한다면, 현 정부에 커다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전범 판결이 '선언'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적 심판'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 후속 운동 역시 중요할 수밖에 없다. 부시의 '선거캠프'보다 더 큰 민중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 지금도 준비위원회 사무실은 불철주야 움직이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전쟁범죄 연재> ① 무차별 공격

부시 블레어 노무현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편집자 주) 인권하루소식은 오늘부터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준비위원회'가 발표하는 전쟁범죄의 내용을 재판 전까지 연재한다.

개전 초기인 2003년 3월 22일, 오전부터 이라크 전역은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격의 공

포에 휩싸인 하루였다. 미국은 이라크 남부 바스라 시내를 폭격해 77명의 민간인을 죽이고 366명의 민간인을 다치게 했다(로이터통신). 로이터통신의 기사는 2003년 4월 8일 바스라의 한 병원에서 하미드(Zainad Mamid.)라는 9세의 어린이를 취재했다. 그날 폭격으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이 어린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 모두 그날 폭격으로 잃었다. 하미드의 경우는 개전 초 10일 동안 발생하고 확인된 30여건의 민간인 폭격 사례 중 하나이다.

부상자들의 사진뿐 아니라 AP는 이미 시체가 되어 병원에 실려온 아이의 사진을 전 세계로 전송했고 로이터와 알자지라 역시 이 날의 부상자 모습과 가족의 장례식 장면을 여러 차례 보도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이 말하는 테크놀러지에 의한 깨끗한 전쟁은 이라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시장과 같은 곳도 반복적인 공격 대상이 되었다. 3월 28일 나세르 시장을 토마호크 미사일로 공격해 32명에서 6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슈알레 거리의 분주한 시장도 토마호크 미사일로 공격해 인근의 누르(Nur)병원에는 철새없이 사상자가 운반되어졌다. 이 병원 의사인 오사마 사크하리에 따르면 최소한 어린이 15명을 포함해 55명이 사망했으며 47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준비위원회]

<기사 처음으로>

<농성장을 가다> ②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보

단식보다 힘든 건 사회적 차별

'장애인등의이동보장법률제정과정장애인교육예산확보를위한공동농성단'은 다른 농성보다 먼저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찬바람을 맞으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박경석 공동대표도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83년 헬글라이더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다는 박 대표는 처음 5년 동안 형이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데리고 나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다고 한다. 그는 "팔딱팔딱 뛰던 사람이 꼼짝도 못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장애 자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며 "처음에는 치료를 해서 빨리 장애를 벗어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지금은 오히려 치료와 재활이 장애 문제 해결의 전부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박 대표는 "물론 재활, 치료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고착화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식은 고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장애를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는 사회는 장애에 대한 '공포'를 유포하는 한편,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들을 집안에만 가두도록 만드는 구조와 환경을 없애는 것이 장애인 인권운동의 핵심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지난 2001년 오이도역에서의 수직형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그동안 서울역 천막 농성, 지하철 선로 점거, 39일간의 국가인권위 점거 단식 농성,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와 백만인 서명 운동 등으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부각시켜 왔다. 이러한 투쟁 속에서 장애인들이 만든 법안이 바로 '장애인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법'이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20일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가 아닌 '권고' 조항으로만 처리하는 등 알맹이 없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을 발표했다. 그는 "건설교통부가 그동안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해 한 일이라곤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이 전부"라며 "장애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항상 예산이 없다는 핑계만 대더니 이제는 장애인을 우롱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노들장애인야학의 교장이기도 한 그는 "장애인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교통편이 없어서' 학교에 갈 수조차 없다"며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육권 등 어떠한 기본권도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이동권'이란 격리되었던 세상과의 연결이며 이들에 대한 편견과 무시를 없애는 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동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가 올 초 장애학생의 무상교육 확대와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 등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예산 삭감을 이유로 위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장애인 교육예산 6% 확보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산역 장애인 추락사에 대한 서울시 공개사과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요구하며 39일 동안 단식을 했던 것이 불과 2년 전의 일인데 또다시 '단식'을 선택한 그는 "굶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사회가 분노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 끝날지 모를 싸움이지만 그가 하는 이 투쟁이 장애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연대를 호소했다.

<기사 처음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을 위해 - 「비폭력 대화」

클릭! 인권정보자료

지은이: 마셜B. 로젠버그/ 옮긴이: 캐서린 한/ 펴낸이: 바오/ 279쪽/ 2004년 11월

우리 일상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인 '언어와 대화방식'을 통해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을 일깨우는 단행본이 출간됐다. 이 책을 '~하는 법' 류의 유익한(?) 인간관계 '기술'을 안내해주는 심리학 교양서로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다. 또한 주로 자본가나 권력자들이 흔히 말하는 '대화'와 '타협'의 의미로 오해한다면 그만 책을 덮어달라고 요구하고 싶다.

지은이의 이력에서도 드러나듯이 분쟁지역, 갈등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인용된 사례는 우리를 둘러싼 억압, 긴장관계에서 어떻게 서로의 욕구에 귀 기울이고, 수용하며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지 일깨워주고 있다. 또한 폭력을 만들어내는 기득권에 맞선 저항의 몸짓으로 비폭력이 가질 수 있는 무기인 '언어'의 힘이 어떤 대화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지은이 로젠버그는 먼저 두 가지 질문부터 시작한다. 첫째, 인간이 자신의 본성인 연민으로부터 멀어져 서로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둘째, 어떤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연민을 유지할 수 있는가? 질문에 대한 천착으로 로젠버그는 연민을 느끼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쓰는 언어와 말이 얼마나 큰 구실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 로젠버그는 연민이 우러나오는 유대관계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대화방법(말하기와 듣기)으로 비폭력대화(Non Violent Communication)를 고안해 냈다. 비폭력대화는 분석이나 비판을 하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관찰하고 그에 대해 어떻게 느끼며,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둘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민의 깊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비폭력대화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은 '폭력'을 통해 길들여진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억압과 왜곡에 대항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힘을 주고 있다. 때론 당혹스럽고 부끄럽지만 '용기'로 마주 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 평화가 침묵을 통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개인이든 사회든, 그 속에 내게 해 있는 공포를 대면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야할 길이 아닐까?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1월 06일 (토)
제 269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희망의 계절'과 악몽의 나날
2. <농성장을 가다> ③ 올바른 과거청산
3. '진상규명 없이 명복 빌 수 없어'
4. 짐거하라! 저항하라! 생산하라!

<논평> '희망의 계절'과 악몽의 나날

부시의 말마따나 지금 미국은 그들만의 정의, 그들만의 영광으로 붉게 물든 '희망의 계절'을 자축하고 있다.

1억4천이 넘는 미 유권자 가운데 60% 정도가 참여한 이번 대선에서 투표자 중 51% 가량이 그들만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침략전쟁에 찬성표를 던졌다. 전쟁광들과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손에 정치권력을 집중시켜왔다. 자국 군대의 총탄 아래 쓰러져 가 있는 생명들을,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의 절규를, 햇살과 웃음을 삼켜버린 공포를, 더 나은 세계를 열망했던 이들의 절망을 끝내 외면했다.

그리고 추악한 미소를 머금은 부시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말했다. "동맹들과 함께 국력과 모든 자원을 동원해 테러와 싸우겠다"고. '제국 경찰'의 가면을 쓴 채 인류의 자유를 위해 봉사한다는 거짓 깃발을 나부끼며 침략과 학살의 질주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부시의 재집권으로 이라크 민중의 자유와 해방은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게 되었으며, 북에 대한 위협도 더욱 드세질 것이다. 공포를 조장하며 선택받은 부시는 강한 미국, 테러와의 전쟁, 신자유주의라는 '복음' 아래 공포의 악순환, 민주주의와 삶의 질의 후퇴, 소수자들에 대한 공격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물론 '인류 공동의 미래'가 아닌 미국만의 미래를 부르짖고 침략전쟁의 중단이 아닌 '더 효과적인 전쟁'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케리 역시 대안은 아니지만 말이다.

또한 유일 강대국 앞에 납작 엎드린 '동맹국' 한국은 파병연장은 물론 추가 파병과 주둔군의 역할 변화 등으로 먹고물을 챙기려 할 것이며, 테러방지법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시도도 연거푸 되풀이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번 대선은 미국이 말해온 자유와 평화의 명백한 위선을, 미국이 떠받들어 온 민주주의의 확실한 몰락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미국인을 포함해 세계 민중들에게 남은 것은 악몽같은 나날의 연속이다. 9.11 이후 이미 미국과 세계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나 악몽 속에서도 위선과 기만의 성을 허물기 위한 분주한 발걸음들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민중들의 반전, 반세계화 운동은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를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한국군 철군과 전쟁범죄의 심판을 요구하는 전범민중재판이 준비되고 있다. 우리 모두 기소인이 되어 평화로 가자.

<기사 처음으로>

<농성장을 가다> ③ 올바른 과거청산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희곡회폐해진 수염은 덩수룩하게 자라있고, 엉덩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칼이 눈에 띈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전국 피해자 추모행사와 합동위령제'가 있던 5일 채의진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준)' 고문은 상복을 입고 있었다. 채 고문은 '과거사가 제대로 밝혀질 때까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89년부터 이제껏 한번도 머리카락에 가위를 대지 않았다. '민간인 학살'이 바로 자기 자신과 가족의 문제이고, 그것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현재이기 때문이다.

49년 12월 24일, 경북 문경 석달동에서 살던 13살의 채 고문은 학살 당시 시신 밑에

짜려 간신히 살아난 '학살의 산증인'이다. 86명의 마을 주민이 학살당했고, 돌도 안 지 난 아이들 5명과 65세 이상 노인 10명도 포함돼 있었다. 채 고문은 "당시 국군은 한 마을을 몰살하다시피 했지만 국방부는 공비들이 학살한 것으로 허위보고했다"고 밝혔다.

전남 구례에서 온 최삼규 씨도 '역사의 아픔'을 현재까지 안고 살아가는 사람 중 하나다. 그는 "마을 사람들끼리도 서로 죄지은 사람처럼 살다 5년 전부터 겨우 '그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며 '여순사건'을 소개했다. 48년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여수와 순천에 있던 군인을 파견하려 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주민들에게 총구를 들이댈 수는 없다"며 거부했다.

최근까지도 여순'반란'이라고 알려진 이 사건을 최 씨는 "여수와 순천에 있는 군인들뿐 아니라 청년들까지 모조리 끌어가 죽인 '여순민간인학살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끌려가 죽은 사람이 분천면 토금마을에서만 19명이었고 그 일이 있고 나서 3년 동안 마을에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었다"고 전했다. 현 정부는 '과거 정부'의 잘못을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진상 규명만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게 최 씨의 생각이다.

합동위령제에는 의문사한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 중 온갖 고문에 관한 사진도 있어 눈에 띄었다. 바로 정중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상임대표의 사진이다. 정 상임대표는 82년 광주미문화원 방화사건 정순철 씨의 도피생활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범인 은닉죄'에 걸려 '서빙고'에 끌려갔다. 정 대표는 보안수사대에서 "'몽둥이 고문', '물고문', '현대판 주리틀기' 등 3박4일 동안 잠 한 슛 못자며 온갖 고문을 다 당했다"고 밝히며 "고문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고 지금도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사 관련법이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차츰 변질되는데, 17대 국회에서는 과거사 관련법을 수정·누락 없이 통과시켜야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외에도 '삼청교육대', '일제시대 강제동원', '인혁당 사건', 'KAL 858기 사건', '군 의문사' 등 수많은 사건의 진실들은 암흑 속에 가려져 있다. 그동안 각각의 사안별로 청산운동이 진행돼오다 지난 8월 '포괄적 과거청산'을 주장하며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로 통합되었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포괄적 과거청산 관련 법안으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기사 처음으로>

"진상규명 없이 명복 빌 수 없어"

과거청산 관련 유족들, 합동 위령제

하얀 국화꽃 한 송이씩을 든 노인들이 계단을 힘겹게 오른다. 굽은 허리를 더욱 숙여 신위를 향해 절을 하고, 꽃을 바치고, 술을 올려보지만 원혼들의 '한'을 달랠 수 없다는 죄스러움에 눈물이 쏟아진다.

5일 일제강제동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등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국가 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여의도 문화마당에 모여 처음으로 합동 위령제를 지냈다.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준)(아래 범국민위)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200여명의 유족들과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4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농성참가자들도 함께 했다.

영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한 지 이미 반세기가 넘어 유족들도 많이 세상을 등졌지만 여전히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범국민위 오종렬 상임대표는 "어둡고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여 영령들의 피맺힌 가슴을 풀어주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했지만 "산 자들이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해 아직도 구천을 헤매도록 하고 있다"며 죄스러운 마음을 표현했다. 이어 "가해자와 그 동조자가 국가와 사회 전반을 깔고 앉아 저들의 안보를 국가안보라고 하고 저들의 기득권 유지를 국가정체성이라 하면서 과거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보수세력들을 비판했다.

위령제에서는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절규가 이어졌다. 군대에 간 자식이 5개월만에 시체로 돌아왔지만 사인도 밝혀내지 못한 채 14년을 보낸 '못난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유족은 "국민이 목숨을 잃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가 무슨 국가냐"며 "국회를 정상화 해 당장 과거청산법안을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전영순 회장은 "삼청교육대 관련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얼마나 지독한 인권유린이 있었는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절규했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사회정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은 4만여 명의 사람들을 죽고 다치게 했지만 현재 불과 3천5백여 명만 조사 대상이다.

위령제에 온 중학교 역사탐구 동아리인 ' &사' 회원들은 "국가 폭력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학교에서도 잘 가르쳐주지 않는다"며 "왜곡되고 숨겨진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 위령제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이날 유족들은 "과거청산을 가로막는 국가와 각 정치집단의 무책임함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며 선언문을 낭독한 후, 상여 거리곳으로 위령제를 끝마쳤다.

<기사 처음으로>

점거하라! 저항하라! 생산하라!

카메라가 담은 '노동자들의 다른 세상', 서울국제노동영화제

서울국제노동영화제가 오는 16일부터 6일동안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열린다. 모두 26편의 국내외 작품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는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은 '점거하라! 저항하라! 생산하라! 다른 세상이 시작되고 있다'이며 그 의미를 "이미 다른 세상은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영화제는 설명한다. 개막작 <볼리바리안 혁명: 베네주엘라 민중의 삶과 투쟁>과 폐막작 <점거하라, 저항하라, 생산하라!>와 같은 작품이 구체적인 현실의 예라는 것.

<볼리바리안 혁명>은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의 후속편과 같다.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중들의 반세계화 투쟁은 '4차 대전'을 방불케한다. 그 주요 진지 중 하나가 바로 '볼리비아'. 대개 혁명적 대통령 차베스를 떠올리지만 이 작품은 '차베스가 있건 없건 혁명을 계속'하려는 민중들의 공동체 조직 '서클'의 투쟁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임금을 떼인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멈춰선 생산라인을 다시 가동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거하라...>는 '다른 세상'에 대한 설득력 있는 예고편이라고 영화제 측은 이야기한다. 경기회복을 틈타 다시 소유권을 빼앗으려는 자본가와 그들을 옹호하는 경찰에 맞서 지역공동체와 함께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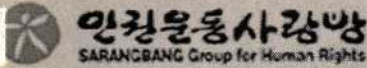
'사유화의 종말'이라는 섹션에서 모두 4편의 작품이 공공부문의 '사유화 문제'를 말한다. <갈증: 물은 누구의 것인가?>는 '깨끗한 물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시도되고 있는 댐건설과 수자원 민영화의 음모와 그에 맞서는 민중들의 저항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백텔사가 볼리비아에서 수자원 민영화를 시도하다 민중들에 의해 좌절된 사건 등을 담은 이 작품은 인민의 '자결권과 발전권 투쟁'의 한 사례인 것이다. 이 외에도 의료제도를 다룬 <출혈, 삶과 죽음을 가르치는 의료제도>, 유전자 조작과 생명 특허 등에서 불거지고 있는 '건강권'과 '초국적 자본의 횡포'를 다룬 <식량의 미래> 등이 상영된다.

영화제의 고정 섹션인 '전세계 노동자의 투쟁과 삶'에서는 해고된 스페인 정보통신기업 노동자의 거리 농성투쟁을 다룬 <이과주 효과>와 켄 로치의 <빵과 장미>에 출연했던 여성활동가 로자와 켄 로치를 조명한 <켄과 로자>가 눈길을 끈다. 청소 용역 노동자의 삶과 투쟁과 함께 켄 로치의 철학, 제작 현장이 담겨 있다. 영화제는 노동자뉴스 제작단이 주최하며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무료상영이다. (www.lnp89.org/8th)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1월 09일 (화)
제 269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테러방지법' 또 고개 내민다
2. <전쟁범죄 연재> ② 비군사적 목표물에 대한 공격
3. ①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① '호랑이굴'에 들어가 호랑이 잡기
4. 주간인권호를 (2004년 11월 1일 ~ 8일)

'테러방지법' 또 고개 내민다

인권·사회단체, "테러 위협은 파병 후폭풍"...제정 반대

정부와 여당에 의해 테러방지법이 또 다시 추진되고 있다. 2002년 국가정보원에 의해 모습을 드러낸 테러방지법은 반인권 악법으로 그동안 인권·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해 무산됐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정부가 '테러 위협'을 운운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테러'를 또 다시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은 5일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대테러위원회에는 재정부, 국방부, 외교부 등 12개 부처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대테러센터장은 국무총리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권력남용 등의 우려를 감안해 대테러 센터를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 아래 두지 않겠다는 등의 근거를 들며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 뿐 아니라 '파병 연장'을 추진해 '테러 위협'을 불러오더니 이제는 또 다시 테러방지법으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인권운동사랑방 박태균 상임활동가는 "마치 국가보안법이 '안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던 것처럼 테러방지법도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 억압적인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물리력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테러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테러 발생의 근본 원인인 파병을 철회하는 길만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대 법학과 이계수 교수는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 센터를 둔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정원의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테러 혐의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정원이 정보수집 권한을 넘어 수사 권한까지 가질 가능성이 높후해 권력 남용의 위험성이 법안 도처에 살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안 의원은 8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테러 센터에 대한 주요 임무를 국정원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 사실상 테러방지법 제정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했다.

2003년 1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에서 형식과 절차만 조금 바뀌었을 뿐 오히려 인권침해의 독소조항이 더 강화됐다는 것도 이번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테러나 '안전' 활동으로 행해지는 규제에 대해 불응하거나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예로 들어 "국민의 기본권 제약이 뒤따르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지난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을 통해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심사 없이 행정명령에 따른 구금조치를 하거나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는 합법적 행위를 범죄시할 수 있다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테러 위협이 파병의 후폭풍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과장된 테러 위협'을 앞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갉아먹으려 한다면 이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또 다시 좌초되리라는 것을 정부는 이제라도 알아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전쟁범죄 연재> ② 비군사적 목표물에 대한 공격

2003년 3월 26, 27일 이틀에 걸쳐 미군은 이라크 국영 방송국과 알위야 지역의 통신 타워에 '벙커버스터(GBU-28,37)' 폭탄을 이용한 공격을 가해 이라크 언론인을 포함 최소 15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95명이 부상했다. 방송국이 화염에 휩싸인 모습은 아부다비 텔레비전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미국은 이를 두고 후세인의 선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제법의 보호를 받는 민간 시설인 이라크국영방송국에 대한 공격은 국제언론기구들과 인권단체들의 격렬한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미디어 시설에 대한 공격은 2003년 4월 8일 아랍 위성 방송 알자지라의 바그다드 사무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져 1명의 직원이 사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미영연합군은 나자프와 팔루자, 라마디 등 수니 지역 내의 이슬람 사원을 '저항세력의 은신처' 또는 '무기은닉처'라는 명분을 들어 포격과 사격을 가했고 폭격으로 발생한 화재로 바그다드 박물관들이 손상되기도 했다.

비군사적 목표물에 대한 공격은 학교와 병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UNICEF의 발표에 의하면 연합군의 공격 과정에서 200여개의 학교시설 파괴 및, 병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과 포격의 피해를 입었다고 2004년 10월 4일 미국 IPS(Institute for Policy Studies)는 밝혔다. 2003년 3월 26일 시리아 접경 투트바의 어린이 병원이 폭격당한 것을 비롯해 4월 2일 오전에는 바그다드 시내 폭격으로 적십자사의 산부인과병원이 피격되어 5~8명이 사망하기도 했고(로이터통신) 4월 20일에는 나시리아의 보건소와 의약품보관소가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되었다. 이 보관소에는 영양실조에 걸린 이라크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줄 6개월 분량의 고단백보조식품이 들어있었다(UNICEF). 또한 4월 9일 미군이 환자를 싣고 가던 구급차에 총격을 가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 당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기사 처음으로>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후랑이굴'에 들어가 호랑이 잡기

뜨거운 여름햇살이 시들해질 무렵, 고양구 국가정보원장이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국정원 과거 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아래 발전위) 구성을 제안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만감이 교차했다. 현대사를 전공하는 학자에게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의 존재는 때때로 좌절과 무력의 벽이었다. 현대사의 굴곡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암약하면서, 결국 정보까지 독점해버린 그들 앞에서 '사실'을 추구한다는 것이 종종 무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실규명의 압박에 시달릴 때마다, 커다란 공룡 몸집의 악마가 '나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 뒤에서 음흉한 표정으로 덤치는 악몽에 시달리는 일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국정원이 자신들의 오욕으로 점철된 과거를 청산하겠다고 나서다니, 시대변화를 실감하면서도 파격적인 까닭에 또한 당황스러웠다. 한편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장벽에 가려, 대번 좌절했던 기억은 정보 독점이 와해되고 그것이 '사료'될 수 있는 호기를 놓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수반했다. 시민단체의 고민은 오죽했으랴!

몇 달 뒤, 마침내 초겨울의 길목에서 발전위가 발족했다. 그간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 청산을 둘러싼 논란이 한반도 남단을 들끓게 만들었던건만, 유독 오히려 이 문제만은 비박한 언론의 시선을 용케 피하면서 진행되었고, 그것 단추를 낄 수 있었다. 저항이 의외로 적다는 것이 기이할 따름이다.

고심 끝에 이 '역사적 약역'을 서슴없이 말아준 민간위원들이 정해졌다. 오충일(위원장, 목사), 안병욱(가톨릭대 교수),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손오철(서강대 교수), 이창호(경상대 교수), 문장식(KNCC 인권위원장), 박한왕(천주교인권위 운영위원), 효림(실천승가회장), 김갑식(대한변협 법제이사), 박용일(변호사) 등 10명. 선불리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야만 하는 길을 선택한 그들의 면면이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 학자나 시민운동가들이 가지는 기대와 우려는 여기서 새삼 논할 필요 없이 분명하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오충일 발전위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

"옛말에 중이 제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깎아줘야 한다. 단, 어설픈게 깎아서는 안 된다. 손을 대면 확실히 해야 한다. 자료를 안 내놓고 버티면 미련 없이 툭툭 털고 나올 것이다. 우리가 어물쩍 넘어가거나, 국정원의 둘러리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발전위는 앞으로 진행될 과거사청산과 관련된 일련의 투쟁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굳이 투쟁이라 한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한 과거청산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이제 기득권 세력과의 치열한 전투가 되었기 때문이다. 국정원에 따리를 들고 있을 그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 김정인 님은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1. 지금, 국회 앞 농성장에선...

장애인이동권·교육권연대,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국회 앞 천막 농성 계속/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 돌입...매일 저녁 '국보법 폐지를 위한 촛불집회' 진행/ 한총련 학생들, '국보법 폐지' 주장하며 무기한 천막 단식 농성 진행(11.2)/ 경찰, 폭력적으로 농성 중인 천막 철거...농성단들 천막 다시 치고 농성 지속 결의(11.3)/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법국민위원회(준),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전국 피해자 추모행사와 합동위령제' 진행..."포괄적 과거사법 제정" 촉구(11.5)/ '국보법 폐지 2차 국민대회' 진행(11.6)

2. '공무원노조'라는 주홍글씨

공무원노조, 근무시간 연장 반발하며 점심시간 근무 거부/ 경남도,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농성 벌인 전공노 소속 공무원 21명 경찰에 고발(11.2)/ 정부, 15일로 예정된 전공노 총파업을 앞두고 가담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와 노조 간부 검거 방침 발표...전공노 "예정대로 총파업 진행" 밝혀 노·정 충돌 예상(11.4)/ 전공노,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결의대회' 진행...집회 참가한 공무원 194명 연행(11.6)/ 전공노 총파업 투표 앞두고 경찰, 전공노 5개 지부 압수수색(11.7)/ 검·경, 전공노 위원장·사무총장 등 노조집행부들 대상으로 잇달아 체포영장 청구(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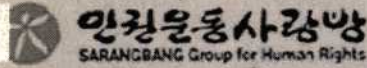
3. 테러 방지? 인권 탄압!

태국 정부, 시위 군중들 향해 실탄 발표...6명 사망, 연행자 이송 중 최소 78명 질식사 20명 이상 부상...국내 인권단체들 주한 태국대사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11.1)/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부시 재집권 확정...국내 인권단체들, 부시 재집권으로 "전쟁과 같은 공포의 악순환, 소수자들에 대한 공격 가속화될 것" 우려(11.4)/ 정부·여당,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키로 결정(11.5)/ 미군, 이라크 팔루자 대공세 위협...이라크 임시정부, '비상사태' 선포(11.7)/ 미군, 베트남전 이래 최대 규모로 팔루자 공격...미 부시 재집권 후 첫 희생양, 최악의 유혈사태 우려(11.8)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1월 10일 (수)

제 269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의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 1. "총파업으로 비정규직 분쇄"
- 2.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에 쐬기
- 3. <농성장을 가다> ④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총파업으로 비정규직 분쇄"

민주노총, 60% 이상 총파업 찬성

노동계의 총파업이 조짐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총파업 찬반 투표의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조합원 중 51%가 참석한 이번 투표에서 67.9%의 조합원이 총파업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한 도시철도노조 등 약 4만 명의 조합원의 투표 결과 집계는 이번 주말에는 투표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그간 비정규직 법안 철회 한일 FTA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총파업을 추진했다. 이 중에서도 핵심쟁점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내놓았다는 법안은 파견근로 업종을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에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과반수 넘는 찬성을 보였다는 점, 이른바 '정치파업'이라는 무게 있는 사안에 높은 찬성율이 나왔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분배'를 내세우면서도 오히려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의 의지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비정규직 철폐 등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며 기한 없는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14일 광화문에서 10만 명이 참석하는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04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총파업 조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보다는 '엄단'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8일 전국노동기관장회의에서 "이번 파업은 정치적 목적을 지녔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이 정한 목적을 벗어난 실정법 위반"이라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대처하라"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지난 2일 기자들과의 회견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로) 파업 강행 시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완전한 노동 3권의 보장을 주장하며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에 들어간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용단폭격'과 같다고 말한다. 지난 10월 9일부터 거의 모든 전국 지부에 경찰력을 배치해 왔고, 8~9일 진행되는 투표를 막기 위해 경찰 병력을 투입해 노조 간부를 연행하고 투표용지를 압수하는 등 '실력저지'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투표 참관에 나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민주노동당 당직자까지도 연행하여 물의를 빚었다. 현재 김영길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권력이 지금 이성을 잃고 있다"며 "투표는 무산된 것이 아니니 포기하지 않고 15일에 총파업을 시작하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전했다. 15년 전 전교조 결성 당시로 돌아간 느낌이라는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의 참관단체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에 쐬기

인권위, "주민들 의견 수렴 필수"

부안 주민들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아직 그럴 수 없다. 사실상 핵폐기장 건설 계획이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백지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주민들을 속이며 사업을 추진해 왔던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9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정부가 핵폐기장 설치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해당 공무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혀 핵폐기장 백지화에 폐기를 막았다.

인권위는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소추방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김인경 공동대표가 2003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핵폐기장 설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왜곡 △부안군수의 독단적인 핵폐기장 유치신청 △공무원 원전시설 견학 강제 동원 등과 관련해 낸 진정에 대해 1여 년만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원사 관계자 등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무리한 해외시찰 실시 △지역 언론기자 등에 기술 접대와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 동원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평가 왜곡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자발적이라지만 가족까지 교육에 참여하도록 한 점 △가족이 가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게 했다는 진술 △일률적으로 견학할 것을 지시 받았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부안군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안군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한 견학을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책사업은 국가가 단독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부가 핵폐기장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부지선정위원회의 활동이나 지난 4월 주민투표를 실시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주민들의 결정권과 적법절차 위반 관련 진정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 이현민 정책실장은 일단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인권위가 1년 이상 결정을 미뤄온 것은 국민의 인권을 책임져야 할 인권위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지선정위원회 활동이나 구성에 대해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주민투표에서는 공무원을 동원해 방해하고 나섰다"며 "인권위가 어떤 근거로 이러한 판단을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부안 주민들은 정부에 부안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핵폐기장 백지화 선언을 요구하며 210일이 넘도록 부안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에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농성장을 가다> ④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학교 폐쇄"는 대국민 협박"

원영만 선생님. 부르는 말이 그리 자연스럽지 않다. '원영만 위원장'으로 너무 잘 알려진 탓일까. 하지만 그도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는 '참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89년 전교조 결성에 앞장섰다. 그해 구속되어 교직을 떠났다가 94년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때 함께 복직했다. 원 위원장은 "해직 기간 동안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생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현재 원 위원장은 임기를 두 달 남겨두고 있다. 네이스 반대, 교육개방 반대, 입시제도 개선, 교원 구조조정 저지 등 2년 동안 수많은 활동을 벌인 그는 "전교조 위원장 임기가 농성으로 시작해서 농성으로 끝난다"고 전했다. 원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주장하며 27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 동안 단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원 위원장은 "전체 학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학교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교육 개혁을 이루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운영권이 법적으로 재단 이사회에 독점적으로 집중돼 있어 사립 재단은 임의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실제로 동해대의 경우 400억 원 이상의 공금을 재단이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수많은 대학들이 사립재단 비리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원 위원장은 "사립 재단의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은 일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현재 사립학교법이 부패와 비리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사립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부패가 척결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통해 △개방형 이사제 도입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구화 △교원임명권을 학교장 권한으로 전환 △비리 당사자 학교 복귀 제한 △교원 스스로 교원인사위원회 선출·구성 △'개교 기간 15일' 규정 삭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다. 재단 이사회의 비리가 심한 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익이사제가 도입되어왔다. 하지만 공익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면 비리를 저질렀던 재단이 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는 끊임없이 분류의 불씨가 남아있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그동안 재단 비리와 학내 분류로 몸살을 앓았던 여러 학교의 공통된 요구이기도 하다. 전교조 역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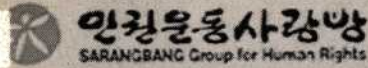
현재 열린우리당은 '4대 개혁입법안'의 하나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원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의 안으로는 사립학교의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단언했다.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애초 제출된 안에서 교육부와 당정협의회를 거치면서 점차 '변질'되었다. 열린우리당의 안은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를 부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약화하며 △교원임면권을 여전히 재단에 귀속시키는 등 사립학교의 개혁을 이룰 수 없게 한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원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의 안은 사립재단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수구·보수세력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그들은 교육자가 아니라 자기 재산 지키기에 급급한 모리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이는 국민을 헐박하는 낯뜨거운 발언이고 '대국민 염포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도 "학교 폐쇄' 발언은 사립재단이 그동안 국민의 교육권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고 사립학교법 개정이 왜 필요한 지 다시 한번 증명해주었다"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임기를 이제 두 달 남겨두고 있지만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이라는 험난한 길을 남겨두고 있다. "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나"는 질문에 그는 "지난 총선 때 '전교조의 민주노동당 공식 지지'가 선거법 위반으로 계류중이라 학교로 바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힘겹게 웃음지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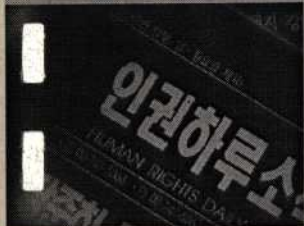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1월 11일 (목)
제 269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 1. <농성장을 가다> ⑤ 언론개혁 3대입법 제·개정
2. 비정규직 차별 폐지하러 왔소
3. <기고> 고립장벽 건설을 중단하라
4.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농성단' 한나라당사 점거

<농성장을 가다> ⑤ 언론개혁 3대입법 제·개정

자본에 휘둘리는 언론은 가라

"대부분의 언론은 사회적 약자의 표현의 자유는 외면하고 있지만 '언론의 자유'가 아닌 '언론사의 자유'는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 최민희 언론개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재 언론에서 드러나는 표현의 자유를 이같이 진단한다. 특히 시민단체를 '홍위병'이라고 몰아세우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공격하고 있는 족벌 신문들의 오만함은 도를 지나쳤다고 지적한다.

민주주의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일궈내기 위해 시민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부단히 투쟁해 왔다. 최 위원장은 84년 '월간 말' 창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바로세우는 투쟁의 현장을 지켜왔다. 국민행동이 지난 9월 21일 입법정원한 신문법의 핵심은 먼저 '정론기능의 정상화'라고 최 위원장은 말한다. "대부분의 신문은 진실보다는 사적 이익을 위해 글을 쓴다"고 단언하는 그녀는 이를 '농단'이라 이름 붙인다. 기사의 진실성을 농락한다는 것. '서교장 자살사건', '우로비 사건' 등이 농단의 예로 볼 수 있다. 기간제 여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문제의 핵심이었으나 언론은 이를 교장 자살 논쟁으로 둔갑시키고 전교조를 마녀사냥했다는 것이다. '우로비 사건'도 대기업 의화발전출이라는 '기업의 도덕성'에 관련된 사회적 의제인데 이를 '고가웃 로비'문제로 변질시켰다.

이렇듯 신문이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것은 족벌적 소유구조 즉 1인 사주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그녀는 풀이한다. 따라서 사주의 주식소유지분을 제한해 '편집의 독립성'을 확보해야만 신문이 정론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 신문법 개정의 취지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소유지분제한'을 아예 삭제해 버려 아무 쓸모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도 언론운동이 말하는 개혁의 과제이다. '조 중 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의 신문시장 점유율은 80% 이상이다. 최 위원장은 이 신문들이 정론으로 경쟁해 독자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무가지'나 '경품'으로 독자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현재 신문고시는 유료대금의 20%로 경품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3개 신문의 준수율은 2-3%에 그친다고 한다. 국민행동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제안했고 현재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라고 한다.

방송의 사회적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방송법 개정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시급하다고 한다. "현재 한나라당이 방송의 독립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앵무새처럼 정권을 대변하던 때를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자면 행정부보다는 오히려 국회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현재 방송의 논조가 지나치게 기제주의적 중립성을 보이고 있어 문제라고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경우를 보더라도 찬·반을 동일한 분량의 시간으로 다루는 것이 지금 공영방송의 태도"라고 지적하며 사회적 의제를 공공의 이익에 맞게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는 이같은 태도는 공영방송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언론운동은 민주화운동의 견인차 구실을 하기도 하는데 최 위원장은 87년 '말의 보도 지침 폭로'를 한 예로 든다. 당시 문화공보부에서 각 신문사에 기사 제목과 크기까지 지시한 보도지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6월 항쟁 후 언론을 억압해 온 '언론기본법'은 폐지된다. 언론운동은 92년 대선 이후 조선일보의 정파적 경향에 눈뜨기 시작한다. "안티조선운동은 밤의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전횡을 일삼은 조선일보가 일개 신문을 넘어 수구의 신념체계를 생산하는 공

장"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최 위원장은 말한다. 안티조선운동과 함께 언론관련 법의 제 개정 그리고 신문 정상화 투쟁이 현재 언론운동의 핵심 이슈라고 최 위원장은 정리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현재 국회 앞 철야농성과 함께 서울, 경인, 충북 등 전국적으로 언론현업자들이 참여하는 국회 압박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비정규직 차별 폐지하러 왔소

10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포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부의 질주를 막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뭉쳤다. 103개 단체로 구성된 '비정규 노동법 계약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10일 국회 앞에서 비정규 관련 개악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돌입 선포식'을 열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선포식에서 공대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비정규직을 확산시켜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을 일상화시킬 뿐 아니라, 중간착취를 합법화시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법안은 파견업종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고 있어 비정규노동자의 희생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자본가들의 제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간접고용'을 실제 합법화함으로써 사용업체가 일정업무를 용역화할 때 임금 삭감은 물론 용역업체를 거치는 과정에서 또 다시 30~50%의 임금에 대한 중간착취를 용인해 저임금 구조를 확대시킨다. 이뿐 아니라 파견노동자 보호조항이 도리어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는 사업주들에 의해 2년마다의 주기적 해고의 근거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법안은 기간이 3년으로만 될 뿐 고용불안은 여전하다. 오히려 파견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이 상시적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열어주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법안의 무차별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공대위는 "비정규노동자의 확대는 빈곤의 심화로 이어져 신용불량자 양산과 빈곤형 자살 등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내수침체의 핵심요인으로 경제적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 박대규 의장은 "그동안의 투쟁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 왔지만 이번 총파업에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전면에서 싸울"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공대위는 안정된 일자리 보장과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인권 보장, 차별 폐지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하는 것으로 선포식을 마쳤다.

한편, 이날 선포식이 진행되는 도중 경찰이 농성천막 설치를 가로막고 나서 참가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참여정부라고 하면서 국민들 없는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분노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을 합법이니 불법이니 운운하는데, 국회의원들이야말로 마음대로 국회 문을 닫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그게 불법파업이 아니고 뭐냐"고 지적했다.

<기사 처음으로>

<기고> 고립장벽 건설을 중단하라

이스라엘은 최고 8m-베틀린 장벽의 약 2배- 콘크리트 장벽 또는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 등으로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의 약 절반을 둘러싸는 고립장벽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장벽을 쌓으면서 출입구를 띄엄띄엄 만들어 놓은 채 팔레스타인인들이 외부로 자유롭게 출입할 권리를 완전히 빼앗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노리는 것은 고립장벽 속으로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집어넣고 그들을 보다 쉽게 감시하면서 장벽 밖의 땅을 합병해 버리겠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2005년 고립장벽이 완성되면 '인류 최대의 감옥'이 탄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 누구도 인류역사에서 총 길이 730km짜리 감옥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장벽 건설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이동의 자유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장벽 건설 경로에 있는 토지를 몰수하고 있다. 또한 팔레스타인인들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카메라, 순찰로 등을 설치하고 있고, '완충지대'를 두기 위해 주변에 있는 가계나 집을 등을 마구 부수고 있다.

고립장벽이 완성된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의 약 12%만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평화협상이 진척되어 독립국가를 건설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고립장벽의 영향으로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되거나 이스라엘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외국으로 갈 수 있는 '고립'된 독립국가를 갖게 된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 장벽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으며, 11월 9일부터 16일까지를 '고립장벽 건설반대 국제행동주간'으로 정하고 오스트리아, 태국,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연대행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인권연대, 평화바다,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등이 매주 화요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화요캠페인을 벌여 왔으며, 9일에 이어 16일에도 고립장벽 문제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http://www.pal.or.kr) 우리의 요구는 이렇다. △현재 건설 중인 고립장벽 공사 중단 △이미 건설된 고립장벽의 완전 철거 △고립장벽 건설과정에서 몰수된 토지 반환 △고립장벽 건설과정에서 토지, 건물 등의 파괴로 입은 손해 보상 등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4년 동안 약3천4백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던지 2002년부터 인류 최대의 감옥을 짓겠다고 지금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식민지로 만든 결과이다.

◎ 미니 씨는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농성단' 한나라당사 점거

10일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농성단'(아래 공동농성단)은 한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공동농성단은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를 주장하며 10월 25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다 이번에 한나라당 대표실을 점거,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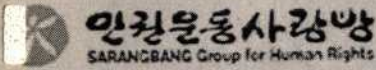
공동농성단은 "현재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현안들은 뒤로 한 채 열린 우리당과의 정쟁에만 빠져있다"며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박근혜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건교부가 내놓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폐기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가 명시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 △장애인 교육 예산 전체 교육 예산 대비 6% 확충 등을 핵심적으로 요구하며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공동농성단 도경만 공동집행위원장, 장애인이동권연대 박현 사무국장 등 6명은 한나라당 사무총장실로 옮겨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12일에는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16일에는 박근혜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사 처음으로>

제목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편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1월 12일 (금)

제 269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권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어둠 속 인권위원 인선 또
2. 클릭! 인권정보자료
3. '말루자 학살'을 멈춰라
4. <연재> 부시 블레어 노우현이 이라크에서 지지른 전쟁범죄

어둠 속 인권위원 인선 또
인권회의, "김호준 안돼"

검중' 받지 못한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민의 인권을 맡길 수 있을까? 국가인권위원회의 새로 인권위원 인선이 또 다시 비공개로 진행돼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이 유력 전 인권위원 후임으로 추천한 김호준 씨에 대한 선출안이 12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인권단체는 물론 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밀실인선'이 진행되어 왔던 것.

김 씨는 언론인으로 33년간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에서 일해왔다. 한나라당은 추천사유서에서 김 씨에 대해 "편집국장을 역임한 흔치 않은 경력이 보여주듯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으로 명망이 높다"고 소개했다. 또한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지 않는 언론이 나, 언론이 배제된 인권 신장이란 생각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이고 전향적인 인권관련 정책개발을 주도하며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화된 공동체로 바꾸어 나갈 책임자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33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11일 논평을 통해 "김 씨가 언론인으로 활동해 왔을 뿐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위원으로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그 정서를 공감하고 인권 문제에 접근해야 하지만 그러한 감수성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김 씨가 언론사 논설위원으로 일할 당시 썼던 글들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 예로 96-97년 '노동법 개악'에 맞서 파업투쟁을 벌이는 노동자들에게 "쓴 약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위면하는 논설을 쓰기도 했다. 또한 95년 김 씨가 서울신문에서 편집국장으로 있을 당시 검찰의 5·18 수사발표 기사에 왜곡된 제목을 강요, 이에 항의하는 기자에게 퇴사 중용 및 인신모독 발언을 해 노조가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탁월한 리더십'은 직위를 이용한 강요를 통해 발휘된 것.

김 씨가 인권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은 인권단체 뿐 아니라 함께 일했던 기자들을 통해서도 제기됐다. 문화일보에서 일하는 한 기자는 "인권위원은 인권철학이 있어야 하고 그걸 바탕으로 각 부분의 것을 조정해야 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이 국가인권위의 행보를 거스르려는 측면에서 김 씨를 추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0월 인권회의는 2기 인권위원 인선을 앞두고 '인권위원의 자질 및 업무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와 대법원 그리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각각 보냈다. 현재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의견서에서 인권회의는 △광범위한 추천과 공개적인 인선절차 마련 △인사청문회 등 검증절차 도입 △인선 후 사후적인 감시와 견제를 위한 활동 공개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인권지침」

퍼낸이: 진보네트워크/ 59쪽/ 2004년 10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아래 디비)가 구축되거나 이런 디비가 통합 혹은 연동될 때 개인정보를 미리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써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소개한 지침서가 발간됐다.

이 지침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가 발표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8가지 원칙-수집 제한, 정확성, 목적명확화, 이용제한, 보안확보, 공개, 개인참가, 책임-에 기초해 각각 항목에 대한 해설을 덧붙여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생소한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아래 영향평가)'를 소개하고 있다.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수집에 앞서 정보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영향평가를 시행하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대량의 개인정보 디비를 구축하거나 이를 통합 또는 연동하기 전에 정보인권 침해의 위험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적전산화 작업,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작업을 사전에 모니터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정보주체인 본인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국내 현실에서 영향평가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저기 관련법률에 개인정보 보호 조항은 있으나 마나하고, 정부는 한술 더 떠 전자 정부를 앞세워 각종 개인 디비를 연동, 통합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영향평가 도입을 포함한 기본적인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기사 처음으로>

'팔루자 학살'을 멈춰라

비상국민행동, "파병연장동의안 철회" 촉구

지난 8일 이라크 팔루자에 대한 미군의 대규모 공습에 이어 이라크 방위군과 영국군을 포함한 1만5천 명 규모의 미군이 '유령의 분노'라는 작전명으로 지상군으로 투입되면서 팔루자 총공세가 자행되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미군의 '팔루자 공세'에서 천여 명의 이라크 민간인이 학살당했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비상국민행동)은 11일 미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팔루자 학살에 항의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다함께 김광일 운영위원은 "팔루자에서는 13살의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치료약도 앰블런스도 없이 죽어갔다"고 전했다. 비상국민행동은 "병원을 폭격해 민간인들이 치료조차 받을 수 없게 하고 앰블런스를 파괴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쏘아대는 것이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파병연장동의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이 한국전 당시의 인천상륙작전과 베트남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작전'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팔루자 공세'는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학살에 다름 아니다. 실제 위신들은 팔루자 주민의 말을 인용해 "팔루자는 미군의 공습으로 이미 '불바다'가 되어 지옥이나 다름없다"고 전하고 있다. "매일같이 어린이 30~50명이 학살당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이라크 임시정부 이야드 알라위 총리는 "팔루자에서 극단주의 자들을 뿌리뽑는 것이 민간인 생명을 보호하고 이라크에서 선거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며 팔루자 공격에 대한 환영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라크 방위군이 포함된 미군이 팔루자의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되레 이라크 임시정부가 이라크인의 학살을 환영하는 꼴이 된 것.

또한 이라크 임시정부는 7일(현지시간) 쿠르드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60일 기한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 선포로 임시정부는 이동과 회합의 자유 제한, 총기 소지 규제, 범죄 용의자의 자택과 사업장 수색 권한 등을 보유하게 됐다. 또 대규모 무장공격으로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지역에 일정 기간 통금·봉쇄를 실시하거나 내란 음모 가담 의심자의 재산을 동결할 수 있고, 편지와 소포, 전보 및 유무선 통신까지도 감청을 할 수 있게 되어 '계엄령'과 다를 바 없다.

또다시 진행된 팔루자 학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매우 높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러어 영국총리, 이야드 알라위 이라크 임시정부 총리에 서한을 보내 "팔루자 공격은 이라크인들의 분노를 촉발할 것"이라며 팔루자 공세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평화바다 이동화 활동가는 "미군이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자 아이들을 포함한 평범한 이라크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미군에 저항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한편 앞선 10일에는 전범민중재판준비위원회가 기소인들과 함께 팔루자 학살을 규탄하는 피스뭉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연재> 부시 블레어 노무현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③ '진정한' 대량살상무기의 남발

개전 초기 한국의 보수언론들은 연합군의 첨단무기를 칭송했지만 이들의 전과는 이라크 민중들에게 가혹한 희생을 남겼다. 특히 이미 사용되고 있던 소이탄(혹은 네이팜탄)에서부터 '데이지커터', '모든폭탄의어머니(MOAB)', '클러스터폭탄'에 이르기까지 이번 전쟁에 등장한 이 무기들은 '진정한' 대량살상무기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2003년 3월 30일, 바그다드 자프라나이야 지구의 민간인 거주지역에 한 발의 네이팜탄(Mark77)이 떨어졌다. 이 폭발과 화재로 모두 네 가구 17명이 사망했고 이 중 7명이 15세 미만이었다. 이 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12세 소년 알리(Ali Esmaeel Abbas)는 목 아래 전체에 화상을 입고 두 팔이 녹아 팔꿈치 아래로는 뼈만 남았다. 다른 시신들의 상태는 더욱 처참하다.

미국 합참의장 리처드 마이어스는 2003년 3~4월에 이라크에서 사용한 클러스터 폭탄은 1천5백 발로 이 중 26발만이 민간인 거주지역 500미터 내에 떨어졌고 이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는 '단' 한 건으로 민간인 피해자는 한 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AFP통신)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이 기간에만 최소 2백 명의 민간인이 클러스터탄에 희생되었고 다른 폭탄이 사용된 공격까지 포함하면 372명에 달하는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그 중 절반은 아이들이다.

클러스터탄에 의한 피해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한 개의 클러스터탄은 2백여 개의 자폭탄을 가지는데 각각의 자폭탄은 또다시 3백 개의 파편을 뿌린다. 직접 희생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는 이 자폭탄의 5~15퍼센트는 폭발의 위험을 가진 불발탄인 채로 남는다는데 있다. 현재 1만5천 발 이상의 자폭탄이 이라크 전역에 터지지 않은 채 널려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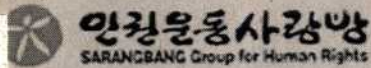
나자프, 힐라, 바스라, 키르쿠크 등의 지역에서는 클러스터탄에 의한 '불의의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003년 3월 22일 바스라에서는 두 살 유아와 여덟 살 아이를 포함해 50여 명이 사망했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다. 같은 해 4월 14~21일 북부 키르쿠크에서는 클러스터탄의 불발탄이 터져 52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아이들이었다.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준비위원회]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김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1월 13일 (토)

제 269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 1. <논평> 농성장을 민중소환의 장으로
- 2. 일하다 다쳐도 쉴!
- 3. 보수언론, 공무원노조 집어삼키다
- 4. 장애인 교육 일보전진!

<논평> 농성장을 민중소환의 장으로

열린우리당이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배신하기 시작했다. 이부영 열우당 의장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안을 두고 "산이 높으면 돌아가고 물이 깊으면 얇은 곳을 찾아야 한다"는 문자를 써가며 개혁 속도를 늦추겠다고 선언했다. 수구세력들의 반대를 '국민의 뜻'으로 오독하고 있는 열우당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안개 속을 더듬고 있는 형국이다.

그는 '북 핵 위기'와 '서민경제 침체'를 이유로 들어 '개혁입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라는 민중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간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국보법의 폐지가 가장 시급하다고 목이 쉬도록 주장해 왔다. 국민의 인권을 옥죄고 있는 국보법의 폐지를 '북 핵 위기'라는 국제정치와 연결시키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서민경제 침체'라는 이유도 "가뭄에 썬 파업이나"는 억지 주장처럼 공허할 뿐이다. 정말 서민경제에 관심이 있다면 비정규직노동법의 개악을 당장 중지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부터 보장해야 한다.

비정규직노동법은 이미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라는 파괴력을 가진 악법으로 평가받았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전체 노동자의 60%를 넘어서고 있다. 민주노총에서 파업을 통해 개악을 저지하려는 이유도 더 이상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추락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열우당이 걱정하는 '서민경제'의 주인공은 바로 '비정규노동자들'이며, 그들의 살림살이를 걱정한다면 '비정규노동법'의 개악 따위는 지금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 부도덕한 사업주로 인해 45개월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충북 우진교통 노동자들, 부당해고로 인해 지난 2001년부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시그네틱스 노동자 등 현재 전국적으로 60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장기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국회에 대한 원망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한 이용석 열사와 같지 않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열우당은 국회를 한 발짝만이라도 벗어나 보라. 그러면 거기서 '진정한 민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앞에 비바람을 맞으며 늘어서 있는 농성 천막은 '철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다. 정략적 목적으로 민중의 열망을 팔아먹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런 국회의원들을 민중의 방식으로 소환할 것이며, 농성 천막은 바로 민중 소환의 상징적 장소가 될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일하다 다쳐도 쉴!

근골격계 직업병 승인받기 어려워진다

"이럴 줄 알았으면 산재신청 괜히 했어요. 수개월 치료받았는데 몸은 좋아지지 않고, 관리자에게 미운 털 박히고, 동료와는 서먹하고... 다시 현장에서 일한다는 생각을 하니 막막하네요."

근골격계 직업병을 앓고 있는 노동자의 말에서는 산재노동자들이 치료에서 작업장으로 복귀하기까지 겪게 되는 어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결국 지난 5일에는 이러한 정신적 고통과 어려움에 시달리던 한 노동자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든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업무 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아래 처리지침)은 뺏길 빠지게 일하다 병든 노동자들에게 산재 치료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해 왔다. 12일 '근골격계직업병 인정기준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아래 투쟁위) 주축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노동계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근골격계질환센터 임상혁 소장은 "정부의 처리지침은 근골격계 직업병을 인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을 제한하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처리지침에 따르면 '퇴행성 근골격계질환'은 직업병 인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근골격계질환은 단순반복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다 생기는 누적된 질환으로 질환 자체가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이다. 또한 근골격계질환이 올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있어 노동자들이 아파도 산재 인정을 받기 쉽지 않다. 지난 7월 도시철도 공사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3명이 근골격계질환을 호소, 산재 신청을 했지만 노동부가 고시한 '11개 근골격계 부단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또한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요양 기간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부의 처리지침은 오히려 치료기간을 일괄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연맹 박세민 산업안전국장은 "산재 보험료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병 상태나 치료방법과 상관없이 부위에 따라 치료기간을 정하는 것은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정부의 처리지침이 산재보험의 민영화라는 경총의 시나리오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에게 처리지침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하고 지역별로 근로복지공단 항의 방문을 진행해 왔으며, 전국노동자대회 전날인 14일에는 정부의 처리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참석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내부지침으로 마련한 것인데 공개적인 토론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가 불참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참석하겠나"며 토론회 참석을 거부한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보수언론, 공무원노조 집어삼키다

20××년, 조선일보 기자들이 사측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할 것을 선언했다.

조선일보 기자들은 과거 조선일보의 친일 행위와 근거 없는 색깔 공세를 통한 마녀사냥, 역사 왜곡, 구독률을 높이기 위한 불법 사은품 제공 등의 과오를 반성하며 '정직한 조선일보'를 만들고자 '민주노조'를 결성했다. 하지만 조선일보사 측은 "노조는 다 빨갱이"라며 "절대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조선일보 민주노조 측은 "우리가 나서서 조선일보의 문제점을 고치지 않으면 조선일보는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남을 것"이라며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조선일보사 측은 또다시 과거의 '색깔론'을 들고나와, "조선일보민주노조의 교육 내용이 북 주체사상과 상당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다. 한 네티즌은 "기자들 연봉이 얼마인데 파업을 하느냐"며 '배부른 파업'이라고 비난했다. '언론고시 준비생'이라고 밝힌 다른 네티즌은 "취업난도 심각한데 기자 하기 싫거든 그만 두라"고 주장했다.

가상의 시나리오다. 전국공무원노조(아래 전공노)가 파업을 강행하자 조선일보는 또다시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조선일보는 12일자 1면에서 "전공노, 9월 노동자학교 1기 조합원 교육에 북 주체사상 포함됐다"는 기사를 발표했다. 한 쪽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쓴 것으로 알려진 '주체사상에 대하여'와 공무원노조의 교육내용을 비교한 표까지 실었다. 이에 전공노는 "교재내용을 일방적으로 짜맞추기한 마녀사냥식 왜곡 보도"라고 비판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언론운동연합, 민주노총,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도 조선일보의 '칠지난 색깔론'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조·중·동은 하나같이 "공무원노조에 단체행동권까지 주는 것은 국제기준에도 어긋난다"며 전공노의 파업에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파업 주동자를 '엄벌'해야 나라의 기강이 제대로 서는 것마냥 선동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언론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실제 미국, 일본, 독일 등 몇몇 나라에서만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고, 유럽연합 15개국과 남아공 등은 단체행동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노동3권 중 핵심으로 전교조의 예가 이를 입증한다. 정부는 지금도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무시하며, 이에 항의하는 교사들의 단체행동마저 징계를 내리는 등 보복을 일삼고 있다. 지난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제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공노는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출범했고 "재갈물린 몸으로는 희망을 만들어낼 수 없다"며 단행행동의 각오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수언론들은 '특권층의 파업'으로 매도하고 있다. 보수언론들은 정작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배고픈 파업'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다가 일부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만은 '배부른 파업'이라는 딱지를 무조건적으로 붙여왔다. 공무원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공무원들에게 '특권층'이라는 비난이 있지만, 이것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탄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더구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과오를 반성하며 잘못을 고치고자 하는 싸움이라면 더더욱 옹호되어야 마땅하다. 서두의 '가상의 시나리오'가 언젠가 현실의 부메랑이 되어 조선일보 자신에게로 되돌아갈지도 모를 일이다.

<기사 처음으로>

장애인 교육 일보전진!

서울시교육청, 장애인교육권연대 요구안 모두 수용

장애인 교육예산 확보를 주장하며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25일 동안 천막농성을 벌여 온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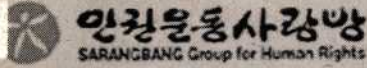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교육청이 장애인교육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것 등 11개 요구안 모두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날 오전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에 전달한 최종 합의문에는 △특수교육관련예산의 연차적 확대 △2006년까지 전체 행정구역별로 유치원,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모두 설치한 뒤 2008년까지 지역별, 학교 급별 불균형이 없도록 연내에 특수학급 설치계획 마련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대한 치료교육교사 확대·배치(2006년부터 법정정원 부합 노력) △서울시에 총 12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2005년) 및 전담인력 배치(2006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김경애 공동대표는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반갑다"고 밝혔다. '방과후 활동'은 2006년에 중학교, 2007년에 고등학교로 확대, 시행된다.

김 공동대표는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장애인교육 현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약속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서울시 교육청의 이행노력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앞에서 진행된 천막농성을 이날 정리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와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1월 16일 (화)
제 269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갇힌 자를 외면하는 '쉼'
2.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3. ㉠ 은증복의 인권이야기 ㉡ '아빠, 평화는 어디서 오는거야?'
4.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9일 ~ 15일)

갇힌 자를 외면하는 '쉼'

수용자들, '운동, 접견 제한' 인권위 진정

법무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핑계로 수용자들의 운동과 접견을 제한해 수용자들과 가족들이 1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을 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는 교도관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자들의 실의운동을 금지하고, 접견 역시 지방 거주자에 한해 허가해 왔다. 이에 원불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인권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 앞에서 면회객들로부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진정인을 모집해, 고혜옥 씨 외 291명이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하게 된 것. 이들은 진정서에서 "행의 집행과 도망, 증거인멸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경우에 한해 수용자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어야 하며, 그 또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며 "운동과 접견 제한은 수용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재사회화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현재 구금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동은 20여분밖에 되지 않으며, 조그만 마당에서 이루어져 '지붕없는 감방'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진정인들은 "운동의 기회와 여건 등이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도리어 실의운동권을 더욱 제한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유엔은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서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의운동을 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공간, 설비 및 욕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그동안 일요일 등 휴일에 수용자들이 운동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토요일을 연속해서 거실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 추석 연휴의 경우 토요일이 휴무일이어서 수용자들은 5일 연속 밀폐된 실내에서만 생활을 해야 했다.

또한 휴무일 접견 제한과 관련해 수용자와 가족들은 "경제적 형편이나 직장 문제로 평일에 시간을 못 내 접견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원거리 거주"만이 아니라 접견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평일에 접견할 수 없는 이유(직장 등) 여부에 따라 공휴일 접견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9월 인권위는 한 수용자가 "운동 제한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막대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목포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 법무부가 실의운동이 금지된 휴무일에 요가나 단전호흡 등 실내운동용 비디오테이프를 TV로 방영하도록 하는 등 대체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기각 이유였다. 그러나 진정인들은 "수용자 대비 수용감방의 규모가 외국의 구금시설에 비해 현저하게 좁은 과밀수용으로 법무부의 대안은 현실성이 없다"며 "대체방안으로 마련된 것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또한 '실의 운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인권위에 촉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최근 국가기관이 하년 개인에 의해 수십 년 동안 감금되어 폭행 당하는 등 온갖 인권 침해를 당하다 구출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절차에만 적용되던 구속적부심을 행정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불법구금으로 확장하는 '(가칭)인신보호법'(아래 보

호법)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제기됐다.

15일 나경원 의원(한나라당) 주축으로 열린 '인신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심희기 교수(연세대 법학)는 "행정기관이나 사인이 다른 사인의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경우"를 '민사구금'으로 개념짓고 법원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해 부당한 구금의 경우 피해자를 석방하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했다. 심 교수는 '민사구금'의 예로 △성매매 업주에 의한 성매매 피해여성 감금 △부양 명목으로 노부모의 재산을 가로챈 후 감금해 학대하는 경우 △정신병원이나 기도원에서 정신질환자를 감금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물론 현재도 '구속적부심사제도'가 있고 불법감금의 가해자를 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 청구주체를 "체포 또는 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인이나 복지시설에 의해 부당하게 감금된 사람이 감금 초기에 '인신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고작해야 행정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사후적인 구제만 가능한 것.

이런 구상은 이미 48년 미군정 시기 시행된 '군정법령 제176호'에 포함돼 경찰·검찰 외에도 정신병원이나 소년보호단체에 감금된 경우에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신청권자의 범위를 '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로 축소해 민사구금은 물론 긴급구속된 형사 피의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보호법이 제정되면 50여 년만에 민사구금도 사법심사로 '인신의 자유'를 즉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는 셈이다.

심 교수는 보호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주체로 감금된 본인 외 검사와 국가인권위 위원(소속 공무원 포함)을 포함해 실효성을 높이고 △민사피구금자가 있음에도 적부심을 고의 또는 과실로 계속리 하는 검사와 인권위원회에 대한 제재조항을 두며 △이유 있는 신청을 부당하게 각하·기각하는 판사에 대해서도 제재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보호법이 제정되더라도 부당한 구금을 줄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인권 실천시민연대 오창의 사무국장은 폐쇄적인 시설의 감금사례를 예로 들며 "민사구금의 경우 피구금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신질환자를 불법으로 수용하는 무허가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외출은 물론 전화나 편지 사용도 금지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무허가 시설은 국가인권위법 상 진정조사대상에서 제외돼 보호법 논의에서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기사 처음으로>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아빠, 평화는 어디서 오는거야?"

"아빠, 미국은 땅도 크데 이라크 땅까지 왜 뺏으려 그래?"
8살 된 아이가 미군이 이라크 팔루자를 무차별 폭격하는 것을 보더니 물었다.

나는 며칠 전 책방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책방에 온 20대 초반의 학생에게 전범 민중재판을 알리는 글을 주었다.

"이라크 침략에 반대하는 글이예요. 우리의 작은 평화 운동이 이라크 아이들을 살릴 수 있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저는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잘 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 세계는 누군가 경찰 노릇을 해야 하고 지금은 미국 밖에 없잖아요. 미국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은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이라크 사람들이 미국의 점령을 반대하고 이라크 저항 세력들을 도와서 같이 싸우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요?" "그것은 테러리스트들이 무서워서 그래요. 대부분의 이라크 사람들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좋아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제 느낌이예요." "그러면 미국이 이라크 침략을 끝내고 한반도 북녘을 침략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군대 가야지요. 총 들고 북한과 싸워야지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공산화시킨다고 생각해 봐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세상은 어차피 약육강식이니 힘센 나라에 빌붙어 살아야 하고 전쟁 반대를 위한 평화 운동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전쟁을 해서라도 한반도 전체를 자본주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그뿐일까. 지금의 학교 교육은 살아있는 목숨을 아끼고 섬기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는 남의 목숨을 죽여도 되고 그런 일을 하는 침략 전쟁에 군대를 보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아닐까. 학교는 왜 평화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이러한 생각 끝에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국 사람들이 이라크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람 목숨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야. 그것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지.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그랬고 지금 이라크 사람들도 그래. 그리고 아빠는 미국이 이라크 땅을 뺏으려는 것을 싫어해서, 책방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벌주는 중이(전범민중재판 기소장)를 나눠주며 평화 운동을 하고 있어." "아빠, 그럼 나도 친구들 것 안 뺏고 사이좋게 지내면 평화를 이루는 거네!"

나는 아이와 나는 짧은 대화에서 작은 평화를 찾았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온갖 경쟁심을 통해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자본주의 교육,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마구 죽여도 된다는 살육의 교육에서 벗어나는 곳에 있다. 온갖 국가 경쟁력이라는 이름 앞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잃어 가는 어른들은 아이들의 맑은 눈을 통해 평화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닐까.

© 은종복 님은 '풀무질' 서점 일꾼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9일 ~ 15일)

1. 지금, 국회 앞 농성장에선...

민변 변호사들, 국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 주장하며 릴레이 1인 시위 시작(11.9)/국회에서 김삼석, 김은주 남매 간첩사건을 다룬 영화 <프락치>(황철민 감독) 상영/장애인 이동권·교육권 쟁취를 위한 농성단,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을 제정'과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권 보장'을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며 한나라당 집거 농성/전국 103개 단체로 구성된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농성 돌입 선포식...농성천막 설치하려 하자 경찰 침탈/전국연합도 국보법 폐지 천막 설치 시도하자 경찰 강제 철거/열우당 이부영 의장, 개혁입법안 국회 처리 속도 늦춰야 한다는 망발로 개혁 열망에 찬물 끼얹어(11.10)/이해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당의장의 발언 취소'와 '국보법 폐지' 주장하는 항의 기자회견 개최(11.11)

2. 공무원, 노동자로 다시 태어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전공노),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국 230개 지부에서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민주노총 기자회견 통해 전공노 파업 연대 투쟁 다짐(11.9)/공권력의 투표장 봉쇄, 투표함 탈취 등 탄압으로 투표 중단, 준법 투쟁 시작(11.10)/경찰 전공노 핵심 간부 33명 체포 영장 발부(11.12)/전국노동자 대회('비정규직 개악법 철폐!' '한일·한미 FTA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공무원 기본법 보장!'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 '미군기지 평택이전 저지' 등) 개최돼 5만 여 시민 광화문에서 집회, 전공노 시 민들의 업호 속 대회 참석해 파업 결의(11.14)...대회 후 연세대, 한양대로 옮겨 총파업 전야제 /전국 77개 지부에서 4만여 명 총파업 돌입/정부,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 총파업에 가담한 노조원 3천200여 명 파면·해직 발표/경찰, 파업 참가자 전국에서 150여명 연행(11.15)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